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전망과 대응책

지난 3월 15일 일본이 1999년 4월 1일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맞은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여옴에 따라 양돈농가는 물론 정부와 사료업체, 동물약품업체, 축산물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정부가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출용 돼지고기는 콜레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10km 이상 격리되어 출하전 40일 이상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었던 농장의 돼지로서 돼지콜레라 백신을 맞지 않은 돼지에서 유래된 것이어야 한다. ② 수출돈육 가공장은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10km 밖에 위치하여야 하며 최소한 40일 이상 돼지 콜레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돼지를 반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③ 돈육가공품은 가열처리 또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살균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

것을 더욱 직설적으로 요약하면 일본은 이제부터 돼지콜레라 발생국가로의 돼지 및 돈육 수입은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돼지 콜레라가 근절되었음을 선포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박멸된 것으로 자신하고 비발생국가에서 이미 취하고 있는 조치를 따를 것임을 알리는 경고 멧세지라고 할 수 있다. 돼지콜레라를 돼지 구제역과 같은 맥락에서 다룬다는 취지이기에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하며 우리가 현재까지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감이 있었음을 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 일본의 돈육 수입위생조건 개정 전망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제정한 국제동물위생규약(International Animal Health Code)에는 “돼지콜레라 비발생국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단 돼지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과 살처분정책(Vaccination and Stamping-out Policy)을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최종발생 후 1년으로 하고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 정책만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6개월을 적용한다(OIE Code: Article 2.1.132).”라고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돼지콜레라 비발생국의 수의당국은 돼지콜레라 발생국가로부터 돼지(멧돼지 포함), 돼지의 정액이나 수정란, 돼지고기, 돼지유래 가공품, 돼지유래 사료원료, 돼지유래 약제, 병리재료 및 생물학적 제제에 대하여 직·간접 수입이나 국경통과를 금지시킬 수 있다(OIE Code: Article 2.1.133).”고 규정되어 있다.



김봉환 교수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이미 일본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돼지콜레라에 관한 규정 에 충족하기 위하여 제64차 국제수역사무국 총회(1996. 5. 20~24)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필요 없는 비발생국임을 선언할 목적으로

1996년 4월 1일부터 돼지콜레라 박멸 6개년 사업을 착수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에 박멸사업 착수보고에 그치지 않고 그간 차질 없이 계획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3개 현에서 백신접종을 전면 중단하는 단계에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긴장케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냉혹한 국제질서는 가치없이 “적당히 해도 된다”는 우리의 현실을 압박해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한 국가가 자국내에 돼지콜레라가 이제는 발생하지 않소 라고 입으로만 선언한다고 해서 공인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시되어야함은 제언의 여지가 없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2년 이후에는 공식적인 발생이 없으며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률도 85%를 상회하고 있어 이미 돼지콜레라가 근절된 상태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없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최종단계의 박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 상태대로 진행된다면 2001년 4월부터는 돼지콜레라백신 없는 비발생국가로서의 조건을 완전히 갖추게 됨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돼지콜레라 비발생 국가가 될 것은 너

무도 당연하게 보인다.

일본이 금년 4월부터 사정이 허락하는 몇몇 현에서 돼지콜레라백신 접종을 전면 금지하고 추이를 지켜본 후 점차 확대 실시하여 내년 9월부터는 일본 전역에 돼지콜레라백신을 금지하고 6개월 후인 2001년 4월 1일을 기해 비발생국가 선언을 위한 사업을 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 것은 지나친 사고의 비약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2년 이후에는 공식적인 발생이 없으며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률도 85%를 상회하고 있어 이미 돼지콜레라가 근절된 상태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없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최종단계의 박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일까?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약을 100% 그대로 충족하는 박멸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 당국의 빈틈없는 계획 및 계획에 준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는 양돈인과 방역당국의 실천의지는 부럽기 짝이 없다. 일본이 계획대로 돼지콜레라 박멸을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는 처지이고 보면 우리는 일본의 박멸성공은 필연적인 결과로 보고 이에 따른 전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2001년 4월

1일부터는 우리 나라에 돼지 콜레라가 근절되지 않는 한 일본에 돼지고기 수출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 확실시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2000년 9월 1일을 기하여 일본이 전면적으로 백신금지조치를 발동하면서 백신접종돈육의 수입을 금지할 것도 예상되므로 2000년 9월 1일부터는 돈육의 대일수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전망된다.

현재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1992년말 이후 무려 6년이상 없으므로 이미 돼지콜레라 비발생국가라고 할 수 있으나 돼지콜레라백신을 전면 중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돼지콜레라가 완전히 박멸되었다고 공식화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해서 당분간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약에 정한 위생조건을 그대로 요구하기는 우리가 따르므로 돼지콜레라 백신 비접종돈의 돈육만을 고집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발생지역 반경 10 km 밖에 있는 양돈장에서 사육된 돼지와 발생지역 10km 이외 지역의 도축장에서 처리가공된 돼지고기 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현재 우리 여건과 입장으로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크게 반발할 입장이 못되리라고 전망된다. 이미 우리도 돼지콜레라 박멸을 2001년에 선언할 계획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2km 그대로 하자, 아니 3km 정도 선으로



하자는 등의 주장을 펴는 것이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사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쉽게 해답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일본처럼 6년간 돼지콜레라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 백신미접종 선언을 한 시점에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의 돼지고기를 아무 조건 없이 수입해도 좋다고 여느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쌍끌이 협상이 우리들에게 던져준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돼지콜레라 박멸 진척상황 등을 충분히 일본측에 알리고 좋은 조건하에서 수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다.

2. 돼지콜레라 근절 없이 양돈산업 미래 없다.

일본이 과연 2001년까지 돼지콜레라를 근절할 수 있을까? 일본이 과연 돼지콜레라 발생국가

의 돼지고기 수입금지조치를 2001년부터 취할까? “돼지콜레라 근절 없이 우리 양돈 미래 없다”는 구호는 돼지콜레라백신을 철저히 하라는 엄포에 지나지 않는다.

돼지콜레라가 발생한다는 보고만 없으면 되는 건데 왜 이래 소란을 피울까? 방역관련 수의사들의 엄포가 심하다는 등 돼지콜레라 박멸은 단시일에 불가능한데 안될 일 가지고 괜히 야단만 친다는 등의 말이 양돈인간에 진담반 농담반으로 공공연히 들려오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던 차에 올 것이 왔다고 여겨짐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벽에 부딪쳐 봐야 정신을 차린다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우리 양돈업계와 방역당국에 일본이 느닷없이 제시한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남을 피할 수 없게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양돈산업에 돼지고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생산량의 16~17% 정도임으로 돼지고기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그 파장은 아주 심각하게 돈가에 반영되게 되어 있다. 많은 양돈관계자들은 대일수출이 중단되면 공급과잉, 국내돈가의 폭락, 이로 인한 투매현상으로 양돈산업의 붕괴마저도 우려되는 사태로 진전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예견하고 1997년부터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나 실행예산 부족, 양돈인들의 참여의식 결여 등이 점철되어 1999년 3월 현재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률이 76.6% 수준이며 금년에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발생건수 및 두수가 일본에서 최종 발생보고가 있는 1992년 이전 5년의 발생 건수와 두수(88~92년에 3건 115두 발생)보다도 많으니 우리 보다도 일본이 앞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조치 없이 이대로 한국 돼지고기 수입을 하다가는 자국의 돼지콜레라 박멸계획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아무리 구호로만 외쳐보아야 소용없음을 하루 속히 인식하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돼지콜레라 박멸의 긴박성을 한번이라도 저녁 9시

뉴스시간에 홍보만 했더라면 돼지콜레라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낮지는 않았을 텐데, 양돈인 들의 단체인 양돈조합이나 협회에서 불협화음 없이 돼지콜레라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더라면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을 텐데, 돼지콜레라 박멸 같은 국가방역사업을 자율방역이다 뭐다 해서 방역책임을 전가(?)한 사태가 없었다면 지금쯤은 많은 진전을 보았을 텐데, 시군공동방역사업단의 구성 및 활동개

시가 바로 박멸사업의 시작인데 돼지콜레라 등 중요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일선 시군공동방역사업단의 구성을 1년에 몇 개씩 하도록 유도하는 정도의 근절대책을 수행한다면 승산이 없다는 것을 방역 당국은 분명히 알아야 할 때이다.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범 국가적인 사업으로 차원을 높여 전력투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같이 살아야 된다는 공동체 의식의 발로인 자조금제도를 양돈인 스스로 출산하여만들어 나간다면 이 일이 더욱 보람있게 해결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본에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던 대만이 구제역 때문에 한 점의 돈육도 수출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한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일본이 돼지콜레라 근절을 선언하면 그 날부터

돼지콜레라 발생국가로부터의 돈육수입을 금지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분명함을 이번 수입돈육 위생조건 사건을 통하여 일본의 의지를 확인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 돈육을 수출하는 미국, 덴마크, 캐나다, 호주 등은 돼지콜레라 비발생국가 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여 국제경

일본에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던 대만이 구제역 때문에 한 점의 돈육도 수출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한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일본이 돼지콜레라 근절을 선언하면 그 날부터 돼지콜레라 발생국가로부터의 돈육수입을 금지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분명함을 이번 수입돈육 위생조건 사건을 통하여 일본의 의지를 확인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쟁력을 갖춘 양돈산업으로 면모를 일신하던지 아니면 돼지콜레라의 위험부담을 안고 명맥유지에 급급한 사양산업으로 전략하는 수모를 감당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단시간에 돼지콜레라를 근절하는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999년 말까지는 콜레라백신 접종률을 100% 선까지 기필코 올려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소두수 사양농가 돼지,

옥외사육 돼지, 부실경영농가 돼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로 일체 백신접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부단한 홍보와 교육으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은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 의무접종이 되도록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시군공동방역사업단이 한곳도 빠짐없이 구성되어 동시에 콜레라 근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모든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위

하여 제작 배포한 “우리 나라 양돈인의 간절한 소망 돼지콜레라 근절 요령”과 “돼지콜레라 방역지침서”에 따라 수행하면 우리도 돼지콜레라를 근절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2000년 상반기는 돼지콜레라의 발생 추적 및 확인을 확대하여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으면 백신금지 조치를 일본과 동일선상에서 취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도 일본에 뒤지지 않게 2001년

까지 돼지콜레라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총집결하여 이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돼지콜레라 박멸은 우리 양돈산업의 존폐를 가늠할 중대 현안이므로 방역당국과 우리 양돈인 모두가 시급히 총력 대응하여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해 내자고 호소하는 바이다. **양돈**